전남도, 병상수급 체계적 관리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17개 시·도 수립 계획안 병상관리위 심의·확정···6개 진료권 분류 운용

전남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 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2027년)의 후속 조 치로 전남도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 종 심의·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대도 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 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 표했고, 지역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엔 병상관리의 기본단위인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 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70개 진료권은 병상 수요·공급 분 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 지역은 인구수와 인구 유출입 기준 모 두에 따라 수요 대비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으 로,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축소를

공급 조정 지역은 인구수나 유출입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다. 병상 공 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병상 기능 전환 등을 통 해 병상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급 가능 지역은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 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병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전남도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일반병상 수는 유 지하되 요양병상은 1024병상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일반 병상의 경우 전남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진 데다 도서지역이 많아 권역 내에 공급 가능지역과 공급 제한 지역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2027년의 경우 병상 수요가 감소하지만, 공급 조정 상황을 고려해 일반병상 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요양병상은 신규 개설 제한 및 폐업 등으로 자연 감축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24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더라도 중증 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감 염병 병상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공공분야 병 상은 예외적으로 신·증설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 가된 병상은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 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해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올 상반기 전남일자리박람회' …현장 취업 기회

30일 목포실내체육관···25개 대·강소기업 참여 139명 채용 계획

전남도가 오는 30일 '2025 상반기 전남일자 리박람회'를 개최한다.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 리는 전남 일자리박람회는 취업준비생과 졸업 을 앞둔 대학생, 특성화고 학생 등 취업을 희망 하는 이들에게 현장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동원F&B을 비롯해 전남 도 내 25개 대·강소기업이 참여해 총 139명을 현장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조선, 식품제조, 관 광숙박,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인력 채 용에 나선다.

먼저 영암군 소재 (유)송운산업, (유)효양 등 조선업 분야 7개 기업이 용접·포설·취부 등 직종 에서 45명을 채용한다. 또 식품 제조기업인 ㈜ 동원F&B, 삼진물산㈜, ㈜대창식품, 농업회사 법인 다솔 등도 생산직 및 사무원 등 58명을 모

관광숙박업종인 에이치제이디오션리조트㈜ 는 프런트 직원과 조리사 등 관광서비스 분야 6 명을 선발하고, 화학물질 제조업체 ㈜로우카본 도 생산직, 연구원 등 10명을 채용한다. 케이씨 ㈜는 전기 공무직, 생산 운전원 3명의 신규 직원 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행사 일정 등 자세 한 정보는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서부플랫폼과 전남일자리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장 채용 외에도 다양한 프 로그램이 마련돼있다. 한전KDN과 HD현대삼 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이력서 사진 촬영, 힐링 상담 테라피 등 다양 한 부대행사를 통한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에도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 큼 많은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고 뜻깊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언론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 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 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2025고합129 (피고인 윤석열)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취재진의 사 진·영상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촬영은 공판개시 전까지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윤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피고 인 등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촬영허 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촬영 요청이 촉박하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치를 밟지 못했다"면서 "추후 (촬영) 요 청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차 촬영 신청이 접수돼 재판부는 지난 15 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 내 촬영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 물 수수・횡령 혐의 첫 공판도 법정 촬영이 허가된

전두환·노태우씨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 로 기소돼 1996년 당시 법정모습이 촬영됐다. 지난 2020년 광주 지법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관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정부. 1년만에 원점으로…수업 참여율은 25.9% 그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관련기사 6면〉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 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 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 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 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 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 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 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 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 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 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 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 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 년 평균 25.9%에 그쳤다.



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변동성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통화 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 결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등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 려보다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가계대출에 더 무게를 둔 결과로 분석된

17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 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높은 환 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 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